제337회국회
(정기회)

#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10월20일(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고용노동부 소관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고용노동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 1
   가. 고용노동부 소관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1
   가. 고용노동부 소관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고용노동부 소관**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고용노동부 소관**

**○위원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 제출한 고용노동부 소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5일 노사정은 당면한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타협을 이루어 냈습니다.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회복하고 정규직 중심의 채용 관행을 확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노사정 합의가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실천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의 취지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개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총지출은 17조 2889억 원으로 금년 대비 11.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지출은 2조 620억 원이며, 5개 기금의 총지출은 15조 2269억 원입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고용보험기금 9조 2757억 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5조 1652억 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634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2728억 원, 근로복지진흥기금 1497억 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년일자리 예산을 15년보다 47.4% 늘려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하였습

니다.

실제 현장에서 개발된 훈련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청년들을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키우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능력 중심 사회 실현의 핵심 과제인 일·학습 병행제는 참여 기업을 6300개소까지 확대하고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재학생 참여 기회를 넓힐 계획입니다.

청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내일찾기 패키지로 개편하여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해외취업 지원 사업 중 K-Move 스쿨 사업은 효과성이 높은 장기과정 중심으로 통합하였고 해외 K-Move 센터를 15개소까지 확충하여 양질의 구인처 발굴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사회안전망을 적극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선진국 흐름과 우리 노동시장 변화에 맞추어 지원 수준, 기간과 요건을 전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여 1조 원 이상 증액하였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사업은 사회보험 가입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그간 지적사항들을 반영하여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지원 수준을 차등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17년까지 100개소 설치를 목표로 내년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간접노무비 신설 지원 등 지원금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여성·장년·장애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을 촉진하겠습니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신규 창출 지원 인원을 1만 5000명까지 확대하였고, 전환지원금 제도는 정액 지원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한편 유연근무·재택근무 제도 등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장려금 제도를 신설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 지원은 156개소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년층에 대해서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를 통해 정년연장 제도가 장년층의 실질적 고용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근로지원인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중증 여성장애인 고용 시 지원 수준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훈련센터를 추가 신설하여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소규모 사업장 산재근로자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산재근로자 요양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를 강화하겠습니다.

근로감독 분야에서 최근 기술을 반영한 수사장비를 구축하고 정보화 시스템을 개편하는 한편 권리구제지원팀 인력도 확충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이 내년 정책·사업에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고용노동 정책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바라며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정책 집행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창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한창훈** 2016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정책 여건 및 전망, 예산·기금운용계획 주요 내용 그리고 예산·기금운용계획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현황과 정책 여건 및 전망 등은 생략하고 바로 주요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17조 2900억으로 금년 대비 1조 780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2조 620억으로 금년 대비 123억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은 15조 2300억으로

금년 대비 1조 7700억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일자리 예산은 10조 8100억으로 금년 대비 16.9% 증가하였습니다.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는 각각 금년 대비 1060억과 780억 증액되었습니다. 고용장려금과 실업소득지원은 각각 2300억, 1조 500억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뒤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1조 4000억으로 금년 대비 47.4%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44% 증액된 884억이 증가하였고 고용보험기금은 금년 대비 48.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출금은 1113억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하단의 재원별·내용별 분포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주요 사업 편성 내용으로 첫째, 청년 고용기회 확대입니다.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대기업 등의 훈련 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훈련 및 채용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을 확대하고 재학생의 참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지원 기업을 6300개소까지 확대하고 최대 2만 명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학습 공동훈련센터도 147개소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입니다.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소·중견 기업 중심으로 청년인턴 지원도 5만 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 청년을 분리해서 고용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청년 내일찾기 패키지로 개편해서 지원하는 데 147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청년고용센터를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 전환해서 40개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K-Move 스쿨은 장기과정으로 통합하고 K-Move 센터를 확충하는 등 해외취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구직급여는 지급 수준 인상 등 제도 개편 내용을 반영해서 1조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성보호급여는 인원 증가, 기간 상승 추세 등을 반영해서 125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간의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였습니다.

다음, 고용복지 연계 및 취약계층 취업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고용·복지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내년에 30개소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지원사업 효율화를 통해서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 수준을 강화하고 고용환경 개선 지원 등 일부 세부 사업은 사업 이관을 통해서 효율화를 도모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별 지원 인원을 조정하고 3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장년·장애인별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 정착을 위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자 신규 창출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전환장려금은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지원 수준도 70%로 상향하였습니다.

유연근무나 재택근무를 운영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년층과 관련해서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32시간 이하로 단축 시 지원하고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 지원을 위해서 근로지원인 인원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인상하였습니다.

중증 여성장애인 지급 단가를 인상하는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유도하고,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훈련센터도 추가로 신

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재예방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확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근로자 요양 기간 중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하단부를 봐 주시면 지방관서 권리구제지원팀 인력을 확충하고 자율 개선 지원 사업장을 확대하며 디지털 포렌식 수사 장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을 개선해서 노동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효율화 도모입니다.

국회 심사결과 등을 반영해서 성과가 미흡한 사업 중에서 6개 사업 98억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실업자능력개발지원 등 지난해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 중심으로 감액하였고, 유사성이 큰 사업 90개를 38개로 통합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부처 간 유사사업도 조정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산업부의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 등을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수 사업 내에서 운영되던 컨설팅 사업도 일터혁신 컨설팅지원으로 통합하였으며, 보조사업 중에서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온 사업은 폐지하였습니다.

이하의 참고자료 등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201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입니다.

먼저 청년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화된 평가기준 마련과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동 사업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해외취업지원사업은 K-Move 스쿨 단기과정을 폐지하고 장기과정의 사업물량을 7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였는데 집행실적 및 경비 집행방식을 감안하면 연내에 전액 집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의 과다편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자가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에 참여할 경우 월 최대 28만 4000원의 추가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참여자를 2015년 대비 40% 감축할 계획임에도 훈련참여수당 예산을 증액하여 불용이 예상되므로 훈련 목표인원 및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사업 중 노동단체 지원 관련 예산은 40% 감액되었는데 60세 정년제 시행과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으로 인해 노사관계의 불안 요인이 증대될 것을 감안하면 대폭 감액조정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하단의 근로감독역량강화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현행 월 25만 원인 근로감독관 활동비를 증액하는 것과 근로개선업무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의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 중에서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연 600만 원에서 9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취업취약계층이라 보기 어려운 청년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사업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하단의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사업은 사업주가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청년을 신규채용할 경우 대기업과 공공기관에게는 연 540만 원, 중소기업에게는 1080만 원의 상생고용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청년채용 기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보입니다만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하고 있어 동 지원금의 연내 집행가능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하단의 전직 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사업은 전직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내일배움카드제 훈련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사업을 통합하였는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양 훈련에 참여할 경우 지급받는 훈련참여수당 지급재원이 각

각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시간선택제 전환지원의 경우 금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주의 기존 인사노무체계 변경에 따른 부담과 대기업에 비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목표인원과 경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가운데 산재보험급여 중 직업재활급여와 진폐연금은 최근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관행적인 추계방식을 사용하여 과다추계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쪽의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 가운데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은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법적으로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액체당금제도 실시 등 사건 증가요인을 고려하여 사건 수를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고, 최하한에 머무르는 변호사 보수를 적정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가운데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 훈련센터 사업은 발달장애인 중심의 직업훈련 제공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자체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사업지연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은 대기업의 중소 협력업체 복지시설 설치지원을 촉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을 협력지원 하고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시행 초기의 집행이 현저히 저조하므로 앞으로 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방법은 국회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첫 번째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예산 질의 전에 현안 질의가 필요하겠어서, 남영전구 광주공장 수은 집단중독 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나마타병으로도 알려진 수은 중독은 사실 대표적인 후진국 질병이고요. 우리나라에서 2000년 폐기물처리업체에서 3명의 중독자가 발생한 이후 올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중독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언제 보고를 받으셨나요? 장관께서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보고를 받았는데요. 조금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은수미 위원** 아니요, 설명은 나중에 제가…… 일단 장관께서는 언제 보고를 받으셨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언론에 보도가 된 뒤로 확인을 하도록 해서 보고받았습니다.

**○은수미 위원** 10월 12일 날 최초 보도가 됐으니까 그 이후에 확인이 되신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은수미 위원** 고용부 산하청에서도 사실 모르고 있으셨던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은수미 위원** 왜냐하면 원·하청 모두, 특히 원청이 유해·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확인이 필요한 게 제가 우연히 입수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보면 고용부가 남영전구 사건 관련 하청 노동자 9명 중 이미 산재 요양을 신청한 2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특이 증상이 없다라고 확인하고 보고할 예정이었다라고 알려졌는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구체적인 관계는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안경덕입니다.

사업주 5명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15명에 대해서 임시 건강검진을 받도록 명령 및 권고를 했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그 전의, 여기 고용노동부 자료에 적혀 있는 내용은 그 전의?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안경덕** 예, 그 전의 것입니다.

**○은수미 위원** 그런데 그 전의 거면, 이게 지금 날짜가 12일 이후로 되어 있는데 받고 처음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했다가 바꾸신 거예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안경덕** 예, 그 전에는 거기에서 근로했던 근로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고 그런 바람에 정확한 파악이 안 됐고요 최근에서야 정확한 파악이 됐습니다.

**○은수미 위원** 저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하청업체 중 서우건설 소속 노동자 3명도 이상 증세를 보였고, 10월 16일 날 검사를 받았고, 특히 기체상태의 수은 노출까지도 고려를 하셨어야 됐는데 그냥 유선상으로, 어쨌든 바꿔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유선상으로 이상이 없다 이렇게 장관께 보고를 하려고 했었던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봐서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세 번째로, 지금 남영전구가 공장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다단계 하청을 줬더라고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안경덕** 예, 그렇습니다.

**○은수미 위원** 도급에 재하도급을 줬어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여쭤 보고 싶은데, 하나는 산안법 제29조제5항에 따르면 '유해·위험 화학물질 제조·사용 설비를 개조·분해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어쨌든 원청이든 하청이든 재하청이든 이것은 안 한 거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안경덕** 예,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수미 위원** 문제는 개조·분해에 철거가 포함됩니까?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안경덕** 일단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철거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철거잖아요. 지금 철거작업 중에 생긴 일이잖아요. 저희가 보면 이것 철거작업, 자르는데 그냥 수은이 터져 나왔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산안법에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처벌하시겠어요, 이것을?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안경덕**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수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출방지 조치라든지 작업장 환기, 설비 기준 이런 부분들이 법 24조하고 29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처벌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처벌 확실하세요? 저는 개조·분해, 어쨌든 이것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법적 하자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철거 부분은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조·분해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재하도급을 한 거잖아요, 행복자원비철에서 다시 우성산업으로. 그러면 도급하는 경우에 재하도급도 포함이 됩니까? 이것은 어때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안경덕** 예, 포함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안경덕** 예.

**○은수미 위원**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그러면 위험한 업무에 대한 도급 금지라든가 이런 조항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되어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안경덕** 예.

**○은수미 위원** 이 부분도 법 개정사항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안경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제조공정에 대한 도급 인가제도 부분만 있기 때문에요, 그 도급 인가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은 시행령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함을 할지 여부는 법 개정 이후에 시행령 개정작업 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산은 왜 감액을 하셨어요? 산업재해 관련 예산을 보니까 약 41억 원 정도가 완전히 삭감이 됐던데요? 산업재해 예방·감독을 위해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36억 원하고 사전예방적 역학조사사업 5억 원. 사전예방조치, 산재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는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이것은 또 뭐예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사고는 났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이 보도가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 전까지, 그리고 노동자들이 인지하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몰랐어요.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 몰랐는지,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제가 여쭤 본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우선 예산 삭감 안 됩니다. 산재는 예방이 핵심이에요. 어떻게 41억

원 예산 많지도 않은데 이것을 다 삭감을 합니까?

두 번째로, 지금 산안법이라가 이런 법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남영전구나 이 도급 혹은 재하도급한 원·하청 모두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정비 하셔야 됩니다. 검토하시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안경덕** 어쨌든 남영전구 건과 관련돼서는 워낙 소규모 사업장이고 그다음에 철거작업이고, 그다음에 다단계 하도급으로 가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의 영향이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보다 철저한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대책도 마련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제 위원**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어떻게 예산실하고 잘 싸워 가지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전체적으로 한 11%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인제 위원** 글쎄 말이에요. 여기 11.5%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기금 지출이 많이 증가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주로 기금에서 많이……

**○이인제 위원** 일반회계를 놓고 보면 몇 % 증가됐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일반회계는 0.6%입니다.

**○이인제 위원** 정부예산 전체 일반회계는 몇 % 증가됐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정부 전체 3%보다 저희가 일반회계 쪽은 덜 확보를 했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러니까 예산 투쟁을 못 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인사말에는 11.5% 증가했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정부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선진국들은 고용노동부가 제일 크고 힘이 강하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인제 위원** 자신감을 가지시고 예산 투쟁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청년일자리 예산이 작년보다 47.4%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됩니까? 전에 없던 사업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를 들면 훈련 또는 인턴 이렇게 각각의 사업이 되어 있는데 디딤돌을……

**○이인제 위원** 그걸 모았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것을 통합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형태로 했습니다.

**○이인제 위원** 나머지 일·학습 병행제라든지 공동훈련센터 이런 것은 다 과거에 하던 사업들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사업을 증액해서 했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 사업들한테 예산만 더 늘려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방법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보완을 하고 지원 수준도 좀 보완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인제 위원**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나온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을 해 가지고 같은 사업이라도 내용을 좀 바꾸고 또 효율화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기금사업의 효율성을 우리 노동연구원을 통해서도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 전체의 기금사업 효율성에 관련된 예산당국의 분석도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면도 있어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을……

**○이인제 위원** 왜냐하면 이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부 입장에서 편리하게 생각해 가지고 그냥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꾸 사업을 하면 안 된단 말이지요. 그 서비스를 받는 청년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고 또 청년들 요구에 부합하는지 이것을 철저하게 분석해 가지고 자꾸 발전시켜서 돈을 투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이 여기 노동부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활동이 거기에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기업을 고용 인원으로 하면 500명 이상을 대기업이라고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통상 300명 이상을 대기업으로……

**○이인제 위원** 아니, 300명 이상은 중견기업 아닌가요,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300명……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업종별로도 다르기는 한데……

**○이인제 위원** 좀 다른데……

아니, 그래서 대기업이 고용 시장에서 몇 % 차지하고 있어요, 대기업 고용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한 12, 13% 이 정도……

**○이인제 위원** 근 12% 정도지요? 그리고 대기업에 타깃을 맞춰 가지고 대기업에서 청년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인제 위원**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청년 고용이 활성화되는 것이 해답이란 말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위원님, 잠깐만 보고를 올리면 이번 노사정 대타협도 대기업이 협력업체 근로조건 향상에 주력하도록 해서 그래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이 향상이 되어서 거기에 청년들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거기에 많이 담았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게 제일 큰 과제라고요. 지금 노사정 대타협에서 제일 빛나는 대목이 그 대목이라고, 이런 행정규범이나 국회 입법사항 이것이 아니고.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수직적이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수평적으로…… 규모가 작을 뿐이지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수직적인, 그래서 약탈적인 이런 관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우선 엄청난 격차가 있고 또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희망이 없으니까. 이것 완전히 문화를 바꿔 줘야 돼.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것은 고용노동부보다는 오히려 경제부처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될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것 관련은 저희들이 노사정위원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중소기업의,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많은 장치들을 점검하는 체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래야만 특히 벤처 중소기업들이 숲처럼 무성하게 생태계를 이룰 수 있고 거기서 청년고용을 흡수할 수가 있는데 지금 거의 사막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매년 요즘 몇 명 정도 고등학교·대학교 졸업하고 노동시장으로 나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49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제 위원** 49만 명?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인제 위원** 아니, 임금노동시장으로 나오는 숫자가 그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졸업생 수가 한 49만 명……

**○이인제 위원** 숫자가 그런가요, 졸업생 수가? 그래도 한 80%가 임금노동시장으로 나오고 있는 거지요, 매년? 그렇지요, 대략?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80% 이상……

**○이인제 위원** 강물처럼 계속 흘러 들어와. 이것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김영주**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인제 위원**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기존 노동시장에서 물러나시는 분들 일자리 그게 또 100% 다 젊은 층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흐름으로써 파악을 해 가지고 고용정책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혼자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라, 이게. 다른 경제부처, 범정부적으로 오히려 계속해서 어젠다를 개발하고 이슈를 이슈 파이팅을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가 투사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노동문제 전문가이신 이인제 위원님께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 오셔서 든든하고 좋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고용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부의장님.

**○이석현 위원** 직업상담원 인건비인 고용센터

인력지원 사업 593억 원하고 또 고용센터 관리비와 운영비인 고용센터 자체 청사관리비가 얼마냐 하면 158억 원 이게 전부 지금 고용보험기금에 편성되어 가지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하고 사업주가 낸 보험료가 주 수입인데 그러면 그 피보험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써야 원칙인데 지금 이렇게 용도 외의 예산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쓰고 있어요.

지금 고용보험기금도 넉넉하지가 않아요. 대량실업에 대비해서 여유자금을 비축을 하는데 그 비중이 2012년에는 2.3배였던 게 지금 2015년에는 1.6배로 또 하락이 되어 있어요. 이래서 걱정인데, 또 국민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마음을 일으켜 주려면 이것을 국가가 잘 관리해 줄 거라는 신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가 부담해야 할 상담원 인건비하고 청사관리비까지 여기서 곶감 빼먹듯 이렇게 쓰면 과연 국민들이 고용보험기금에 믿고 가입할 수가 있겠는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고용센터 인건비, 관리비 같은 거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되겠는데 장관 생각이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기본적으로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센터랄지 또 고용서비스를 우리 취약계층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인력도 불가피하게 증원이 되고 또 공무원으로 다 안 되어서 우리 상담원도 채용하다 보니까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인건비나 관리비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할 게 아니라 급히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됩니다.

또 한 건 얘기하자면 모성보호 육아지원 이 사업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지금 아시다시피 모성보호 육아지원은 출산 전후해서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이런 등등으로 도와주는 것인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이 9300억 원입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계정에서 또 부담을 하고 있어요. 실업급여하고 모성보호는 전혀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신설할 때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건강보험이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과 일반회계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 맞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임시방편적인 건데 이게 정상인 것처럼 장기화되어 버리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도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보험이 임시방편으로 맡기로 했으면 정부가 장기적으로 다른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모성보호급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큰 금액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또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여유자금도 고갈되고 있고요. 이래서 재원 대책이 시급한 것입니다.

국회가 2001년에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부담 적용 확대를 위한 촉구결의라 해 가지고 결의를 한 적이 있어요. 산전휴가급여를 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비용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재정 대책과 또 제도 개선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으로 이관시키는 등을 위한 그런 모성보호급여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가 정부에서 그동안에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노사정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합의사항에도 일반회계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부분이 합의도 있었고요. 정부 내부에 이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논의할 시간들이 없었습니다마는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도 어느 정도 확보됐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에 출산휴가 부분이라도 건강보험에서 한달지, 아니면 전체 비용의 일정 비율을 일반회계에서 한달지 이런 대안을 정부 내에서 좀 논의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그런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지금 노동단체 지원금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 여기 관련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2015년의 77억 원에서 2016년도에는 53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노동단체 지원금이 많

이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37억에서 17억 원이나 삭감이 되어 가지고 내년 예산은 20억입니다. 말하자면 45%나 삭감이 됐어요. 그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노동단체 지원, 그동안의 통상적인 지원을 넘어서 임금체계 개편에 노사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원을 좀 해 주려고 기존 지원 단체 예산을 좀 빼서 새로운 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새로운 사업은 반영을 못 하고 기존 빠진 부분이 빠져 버리는 바람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작년에 노동단체 연수원도 해 주려다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임금체계 개편이나 이런 부분의 절실함도 있고 또 노동단체 간부들에 대한 교육훈련도 좀 강화할 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어서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런데 저기를 보니까 기재부가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 평가라고 하는 데 보면 단계적으로 감축이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를 했는데 다만 그 비율이 그 보고서에 보면 10%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보다 크게 45%나 감축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라 얼른 납득하기 어려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할 수 있나요?

**○위원장 김영주** 예.

**○이석현 위원** 그래서 그게 좀 무슨 다른 뜻이 있나…… 특히 지금이 어떤 때냐 하면 노사정 대타협을 해야 되는 때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석현 위원** 9월 15일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졌다고 해도 대화가 종결된 게 아니고 지속되어야 되는데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추가 논의도 필요한데 이런 노사정 대화가 진행 중일 때 노동단체 지원금을 대폭 삭감한다고 하면 평소보다도 더욱 불필요한 오해도 일어날 수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또 무슨 갈등도 유발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증액해야 되는데 얼마나 증액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국회에서 올린다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도 106억 정도…… 저희들이 처음에 기존 사업에서 일부를 빼서 신규사업으로 하려다가 신규사업이 안 들어가고 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사업 몇 꼭지를 통해서 106억 정도를 염두에 두고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또 예산당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석현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힘써 넣어도 예결특위에 가면 또 도로 싹 깎아 놓기 때문에 정부에서 넣어 놓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넣어 놓아야 돼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산당국이나 예결특위는 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주**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영 위원** 새누리당 양창영 위원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인가 대통령께서도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하셨는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올해 예산이 5793억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591억이 감소되었더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양창영 위원** 대통령 말씀도 있었고, 또 이 사업 취지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또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올해 기 가입자하고 신규 가입자 모두 지원 수준이 50%였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는 기 가입자는 40%로 낮추고 신규 가입자는 60%로 늘려서 신규 가입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인 것 같은데, 자료 화면이 있습니다만……

(영상자료를 보며)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에 140만 원 근로자 기준으로 1인당 월 추가 지원액이 근로자에게는 7210원이고 사업주에게는 7560원 정도에 불과한데, 신규 가입자의 유인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자 지원 수준을 한 70%까지 확대하더

라도 근로자가 한 1만 4420원 또 사업주가 1만 5120원 정도로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법상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입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는 처음 가입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신규 가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어떤 유인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50%에서 10% 늘려 갖고는 그 유인책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70%를 해 주는 게 저희들도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창영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사업의 지원 대상 임금 수준이 제도 시행 이후에 매년 5만 원씩 상향 조정됐는데 내년도 예산의 경우는 올해 수준인 14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편성된 것 같아요.

물가상승률이나 또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지원 대상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40만 원으로 해 놓으면 최저임금이 8.1% 올라서 금년에 받던 근로자들이 일부 내년에는 제외될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도 약간, 적정 부분 인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140만 원을 145만 원으로 한다랄지 일정 부분 올려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양창영 위원** 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거나 또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 그리고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경우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양창영 위원** 이 가운데 시간선택제 전환의 경우에 올해 예산이 30억 원이었고 내년에는 이보다 11억이 증액된 41억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실적 또 집행 부분은 좀 부진한 편이기는 합니만 올해 승인 기업이나 지원 인원 확대 추세를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소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금년 2월, 9월 실적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의 자료화면 보시지요.

시간선택제 전환 대상 승인 기업이 올해 2월에는 27개였는데 9월에는 442개입니다. 또 승인 인원의 경우에도 올 2월에는 120명이었습니다만 9월에는 2016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원 인원도 올 2월에는 사업 신청 후 지원까지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1명도 없었습니다만 9월에는 183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올 9월부터 사업주 추가 부담을 자율로 변경하면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전환 장려금 제도를 변경했기 때문에 보다 개선된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종합적으로 감안을 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더 확대 편성했어야 했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일·가정 양립이 되기 위해서는 출산육아기에 노동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휴직 내지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했다가 육아가 어느 정도 끝나면 다시 풀타임으로 전환하는, 전일제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초창기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은 실적 증가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증가율이나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활성화되도록 홍보나 이런 부분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영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근로나 또 전일제 근로 관행 이러한 것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체적으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어떤 의지나 인식이 부족하다든가 또 홍보가 잘 안 되면서 사업주나 근로자가 실천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좀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문화 환경을, 좀 변화하도록 추진하는 것하고, 또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점차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육아기·출산기에 근로시간 단축하는 시간선택제도 중요하고 또 거기까지 가지 않지만 근로시간 자체를 유연하게 또 근로 장소를 재택이나 이렇게 좀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이라고 봐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분위기를 사회 전체적으로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 31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써서 그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양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장하나입니다.

장관님, 제가 신규사업 요청을 하나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특별법 제22조에 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서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특별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2016년 정부예산안 어디를 봐도 이 22조에 대한 시행 의지라든가 실제적인 사업이 없어서 상당히 당혹해하고 또 지역 주민들은 실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과 또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안산시에 있는 반월·시화산단이 불법 파견 천국이다', '불법 파견 메카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드렸고요. 정말 거리의 한 건물에 층마다 한두 개 파견업체들이 있을 정도로 어떤 파견의 문제가 계속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1만 9000여 중소영세 사업장들이 있고 그중의 95%가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이 파견업체의 이런 서비스를 영세사업자 위주로, 공공에서 이런 취업 서비스를 대신하여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노무관리라든가 인력수급에 곤란을 겪는 작은 업체들도 돕는 이런 공공취업 서비스가 불법 파견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 '안산일자리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립하는 게 세월호 이후 침체된 지역의 문제도 해결하고 또 지역의 원래 고질적인 노동 문제도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 시설에서는 단지 취업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상시적인 구인구직서비스 제공하고 또 무엇보다 문제인 청년일자리 문제 때문에 청년 고용이나 또는 창업을 도울 수 있는 청년허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경력단절여성 또 결혼이민주부 이런 여성들의 취업을 돕는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신세대 기술, 3D 프린터라든가 보석가공과 같이 고부가가치 사업은 또 그 지역에 맞게 특별한, 도움이 되는 교육 사업까지 할 수 있는, 일자리에 있어서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심 역할을 이 센터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거의 4000㎡에 달하는 부지는 안산시가 무상으로 제공할 의지도 있다고 확인을 확실히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이러한 일자리센터를 건립하는 데 2016년부터 3개년 동안 총 90억 원의 이런 건축비와 시설비들이 소요될 것으로 아주 간략하게나마 예산을 짜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부예산안에는 없었지만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기도 하고 또 지역의 불법 파견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말씀,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주셨는데요. 지난번 국감 때 또 국감하기 전에 안산·시흥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들이 사업장 입장에서 사람을 못 구해서 파견업체에 의존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근로감독을 통해서 불법 파견이 안 되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거기에 정상적으로 서비스하도록 우리 고용센터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인력 수급이 어려운 건 맞는데 같은 업체에서 3개월 이상 또는 최장 6개월 이상 일하는데도 계속 업체명이 바뀐다거나 이런 불법, 편법을 통해서 파견 상태로 유지되는 게 문제인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제안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좀 적극적으로 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에는 정부에서 이번에 내놓으신 예산안 몇 가지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에도 제가 질의드린 바가 있는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데 신규채용이 일어난다,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신규채용 계획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임금피크제와 관련이 있는 신규채용인지 판단하기에는 아주…… 제3자,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장관님께서 아직 그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지금은 혹시 판단 기준들이 세워졌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걸 저희 위원실로 일단 내용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소위 때 제가 적극 참조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운영지원 예산 그리고 한국폴리텍대학의 운영지원 예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둘 다 제가 증액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건 아니고요, 노동부에서 이렇게 위탁이라든가 민간에 용역을 줄 때는 시중노임단가를 다 준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산하기관 두 군데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억 2900만 원 정도면 위탁 노동자들의 시중노임단가를 맞출 수가 있고요. 한국폴리텍대학은 규모가 많이 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소요 예산이 지금 80억으로 예상,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노임단가를 지키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노동부가 당연히 적극적으로 보아 주시리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는 고용노동통계조사 예산입니다.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올해도 예년과 크게 다름없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110억 정도 정부예산이 책정됐는데 10억 정도를 증액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0억이 딱 고정된 예산은 아니겠지만 우리 고용지표 중에 청년체감실업률의 특화된 이런 통계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대안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청년에 관한 우리 정부 자료가 부족해서, 취업 준비 중인 알바생, 취업 포기자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면 잠재적으로 취업하려는 자인지, 아니면 소위 졸업유예자, 요새 4년만…… 8학기 이상, 10학기, 12학기 다니는 이런 학생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청년고용지표 창출에 추가 예산을 투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마지막 질의가 될 텐데요, 근로감독 역량 강화에 아주 눈길을 끄는 예산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위 디지털포렌식팀, 디지털증거분석팀 신설 예산 3억이 들어와 있어서 보았더니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나 불법 파견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 증거입증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설비도 마련하고 또 관련 경험자, 전문가들을 특채를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요, 너무 좋습니다마는 사실 그전에도 저희가 가까이는 갑을오토텍 사건 때도 압수수색영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구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라 요청드렸는데 저는 정부의 의지, 우리 노동부 의지를 조금 의심할 수 있는 이런, 약간 수사 의지의 뜨뜻미지근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는 예산 증액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해서는 증액, 감액이 아니라 어떤 부당노동행위나 노조법 위반 사안에 대

해서 우리 정부 의지가 이렇게 강력한 것인지, 노동부가 이 예산 드리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수사에 나설 것인지 그런 의지 장관님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말씀하신 세대 간 상생지원금은 신청을 하면 공모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청년을 말 그대로 통상보다 더 이렇게 하려는 의지를 가장 중히 보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저희들이 심사, 일정 요건만 되면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심사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청년 채용을 늘리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이 시중노임단가를 지킬 수 있도록, 산하기관의 지역이나 지사나 캠퍼스가 많은 데 경우는 예산이 많아서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고용통계조사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감독 장려도 중요하지만 부당 노동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장관님, 장하나 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생고용지원금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청년 신규채용을 하면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금피크제와 상관없이 청년 고용을 하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업장이 해마다 신입사원들을 채용을 하는데 그러면 그거와는 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심상정 위원** 일각에서 지금 사중손실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제출되는 시기니까 뭔가 세부적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좀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할 때 정년 60세에 맞게끔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됐기 때문에, 또 임금피크제를 넘어서 임금체계 개편을 하거나 또는 통상적으로 한 2, 3%의 임금을 인상을 해 왔는데 고임금 업종 같은 경우는 임금 인상 자체를 자제하고 그 재원이 청년 채용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몇 가지 요건을 전제로 하고 그 재원들 플러스 기업이 더 투자를 해서……

**○심상정 위원**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지금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800조니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 기업 자체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정책 의지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청년을 신규로 채용을 했을 때……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청년 채용이라는 게…… 아니 모든 회사가, 기업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이유는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고 자기들 탐욕만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어요, 정부에서도 지원할 이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생기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규채용과 투자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력하게 주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과 같은 청년 고용 절벽 시대에는.

그런 대기업이 마땅히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과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이상의 어떤 청년 고용을 위해서 정부가 일정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하고는 구별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업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을 또 해야 되는 일에 정부 예산까지 써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게 원래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할 경우에도 그것이 실질적인 고용보장이 정년까지 이루어지는 것하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58세에 그만둬야 되는데 60세까지 하게 하니까 신규 고용 T/O가 줄어든다' 이게 그동안의 논리였는데 그것하고 무관하게 이게 지금, 말하자면 청년 고용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게 되면 이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대기업들이나 공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금피크제 자체로 인해서, 정년 60세로 인해서 임금피크제를 하면서 본인들의 고용은 보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30만 개

정도 신규 채용 여력이……

**○심상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상생고용지원이라는 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피크제로 인한 고용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간극을 메우는 그런 지원 예산이냐, 아니면 이것하고 상관없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임금피크제하고 상관없이도,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드셨는데, 그렇게 지금 지급을 하실 생각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그러니까 그 사례가 통상적으로 A라는 회사를 예를 들었을 경우에 현재 58세로 정년이 되어 있는데 어떻든 정년 60세로 되면 앞으로 2, 3년간 한 30명이, 과거의 사례대로 하면 한 30명의 정년퇴직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지요.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 예산 심의는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중손실이 예견되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서를 하나 내서 지적을 했지만 지금 5년간 OECD 국가 중에 기업의 이윤이 가장 높은 비중을…… OECD 평균보다 7%나 많이 가져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리고 청년 고용은 대기업들이 마이너스예요. 이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채용하는 데 국민세금까지 퍼 주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사중손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상생고용지원 방침, 방안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에 저는 제출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심상정 위원** 그러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심사가 선행되고 예산 심의가 되어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말이지요, 이게 올해 예산 집행률은 0.04%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이게 말하자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100억을 한 것인데, 올해는 44억 증액됐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심상정 위원** 이거 어떻게 쓰실 건가요? 올해는 집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시행 자체도……

**○심상정 위원** 장관님, 이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거든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정규직으로 고용 관행을 정착하겠다, 대통령 되신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중점적으로 두는 공약이면 주무부처에서, 그동안에 한 번도 논의 안 한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에 단박에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공약으로 내건 일을 여태껏 준비도 안 됐다가 이제 신규사업이다 그래서 지금 정규직화 하는 것 이 정도 0.04% 집행률밖에 안 된다, 솔직히 정규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이런 계획이 나올 수 있어요?

예산은 2015년 최초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대통령 공약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정규직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그때부터 수립됐어야 되고 그런 집행계획이 되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았다' 그것은 '대통령 공약이지만 정규직화 방침은 박근혜정부가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공약이 아니다, 장관도 관심 없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다 마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어떻게 박근혜정부의, 정부 여당의 이번 법안에도 그렇지만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할래 아니면 잘릴래' 이것 말고 '정규직으로 전환할래' 이 선택지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지금 박근혜정부의 공약에 따르면 바로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 위한 이 지원금을,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금을 정규직화 지원금으로 다 합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그 계획을 착실하게 계획을 세우면 청년고용이 저는 훨씬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노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생고용지원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1080만 원, 대기업에 540만 원 지원으로 청년이 채용되면, 성실하게 근로하면 정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 총액인건비의 아주 몇 %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유인책 때문에 기업들이 청년을 채용한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래서 임금피크제 재원 그다음에 정부가 지원하는 소액의 지원을 토대로 해서 거기의 몇 십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업에 투자해서 추가로 채용된다는 철학이 거기에 내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30만 명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능가하도록, 30만 명 이상이 채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강조하신 대로 기업의 신규투자와 청년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는데, 다만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의미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상정 위원** 그런데 장관님,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그렇게 지원해서 평생 고용이 되는 것을 뭘로 보장하십니까? 평생 고용이 됩니까? 박근혜 정부 17년까지만 딱 채용하고 말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그게 한 번 채용을,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라고……

**○심상정 위원**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면 준다는 게 어디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 심사할 때 정규직, 무기계약 채용했을 때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심상정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잠깐만요.

비정규직 기간제까지 연장하면서 정규직 할 경우에만 채용한다 그게 지금 없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심사할 때 그렇게 할 겁니다.

두 번째,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금년에 처음 사업을 시행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고용지원사업들이 당해연도에는 실적이 부진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완벽하게 홍보되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8월에는 113개 기업에서 약 1200명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면서 또 지원 부분도 인상분의 50%, 70%로 늘렸고 간접노무비도 신설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서……

정부 부문은 2년 이상 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통해서 선도를 해 주고 민간 부문은 지원제도를 통해서 확산되도록 하면서, 또 저희들이 기간제나 파견의 일자리를 규모별로 정확히 파악해서 지원과의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봉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총지출이 17조, 그중에 기금이 15조입니다.

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총지출표가 나와 있고 안에 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1·2·3·4항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노동개혁에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노동부가 예산을 짜 놓고 지원은 해 줍니다만 그 지원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문제는 이때까지 사례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지원되어 나가는 금액에서 로스되는 금액이 엄청날 겁니다. 그 점을 감안하신다면 예산을 짤 때 그런 점도 감안해 가지고 어떻게 운용이, 제대로 쓰였나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법 개정안까지 제가 냈습니다만 장관님께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챙겨 주시고,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고용보험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내놓는 돈입니다. 이거 정부 쌈짓돈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목적을 이탈해 가지고 일탈해서 쓰고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사정 합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요?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할 사업은 가능한 대로 일반회계에서 빼내도록 계획을 그렇게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거 예산 통과될 때도 많은 장애요인이 있을 겁니다.

기여자가 아닌 사람이 그 혜택을 보는 것은 삼가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데 장관님, '좀비산업'이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최봉홍 위원** 여기 대학도 있고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지원 나가는 것이 결국 좀비산업을 우선 연명시키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선정할 때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성보호 문제는 2001년도 결의된 사항도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국회에서 결의를 했지만 여태까지 십수 년간 그대로 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이 전체 비중의 50%가 넘습니다. 9조 2000억인데, 이렇다 해 가지고 그거 빼내는 항목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대해서 한두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신규가입자 69만 5373명에 대해서 192억을 지원했고, 32%입니다. 가입 중인 자에 대해서 401억 8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67%입니다.

금년에 이게 조금 줄었다고 정책을 바꿨습니다마는, 가입된 사람한테 지원할 필요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기본적으로 가입을 촉진해야 된다는 목적이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아주 저소득계층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보호 틀 안에 놔두기 위해서 기 가입자……

**○최봉홍 위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원해 줘 봐야 고마움 못 느낍니다. 정부가 당연히 해 주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가입을 회피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또 10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간 이동률이 절반을 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최봉홍 위원** 예를 들어서 저임금,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가 2만 9870원 지원받는 대신에 여기 가입하면 수반되어서 따로 물어야 할 돈이 뭡니까? 건강보험 가입해야 됩니다. 건강보험 3만 7500원 더 내야 되는데 가입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원래 의무적으로 다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최봉홍 위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데 거기 가입을 하게 되면 자연히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는 가입을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 자영업자 개업·폐업이 확인되고 있습니까? 확인도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고 상습적인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재, 홍보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상생고용지원, 방금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대기업에 540만 원, 중소기업에 1080만 원, 중복 안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이 부분은 다른 지원하고 중복이 안 되게 저희들이 공모를 받을 때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최봉홍 위원** 지원금이 없어도 고용할 사람은 고용을 할 것인데 거기에다가 1080만 원, 540만 원 지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말씀드린 대로 정년 60세 시행하면 약 30~40만 명의 채용이 줄어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봉홍 위원** 오히려 이것은 고용하기 전보다 고용한 후에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채용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실제 고용이 이루어질 단계에서 지원할 겁니다.

**○최봉홍 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청년희망펀드, 재단 설립해 가지고 하는 것 신문에서 많이 떠들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최봉홍 위원** 거기서 염려하는 점 발생되지 않도록, 조성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임금피크제 여기도 '지원', '지원' 하는데 임금피크제 한 지 우리나라 산업현장에 제가 알기로 한 10년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한 2만 2000곳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10년 됐는데, 앞으로 새로 하는 데만 지원합니까, 한 데도 지원해 줍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한 데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지원 필요합니까? 그거 국고 낭비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나름의 고용……

**○최봉홍 위원** 해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뭐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처음에 실시할 때 정부가 일부 지원하고 본인들 부담을 통해서 임금피크제를 하고 또 현재 있는 근로자들이 정년 때까지 또는 정년 이상으로 일할 수 있게……

**○최봉홍 위원**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데,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 원래 한시적으로 되어 있어서 시행령 개정을 해서 11월에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서 내년 시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봉홍 위원** 행정입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요건을 갖추도록 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법률적 문제는 없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임금피크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해 가지고 10여 년 다 되어 가는데 그 사람들, 혜택 안 보고 나간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것도 지원해 줘야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임금피크제 저희들이 100인 이상, 일정 규모 사업장의 7500건을 분석해 봐서 임금피크제를 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장년도 더 늦게까지 일하는 비중이 40%가 높고 그 사업장의 청년 채용 비중이 16% 정도가 높아서 임금피크제의 효과는 입증이 됐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하여튼 고용보험기금을 내는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다 공감하고요.

첫 번째, 기금이 기금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에는 인건비랄지 말 그대로 제대로 된 고용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건물 임차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일반회계로 가고 기금은 사업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님 지적대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성보호 관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셨지만 이번 노사정 대타협 안에서도 일반회계의 지원 부분을 늘려야 된다고 하고 있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100% 증액했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다듬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서 일반회계 또는 건강보험에서 분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신규 쪽에 해 줘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당국에 신규 쪽은 더 지원하고 기존은 줄이도록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내 봤더니 9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이 200만 원 수준이라면 아주 저소득층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실효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봉홍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특히 신규 가입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최봉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우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장하나 위원이 좀 질의를 했는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우원식 위원** 이게 준수율이 지금 38%에 지나지 않거든요. 특히 시중노임단가는 한 45% 정도 되더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 통계로 나왔습니다.

**○우원식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또 해당 기관에서도 노력을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준수될 수 있도록……

**○우원식 위원** 그런데 노력하는 건 좋은데, 오

늘도 제가 기자회견 하고 왔는데, 국회에 있는 청소노동자들도 사무처에서는 예산을 올려요. 폴리텍대학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것도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80억 추가로 드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래서 올리지도 않았어요.

노동부에서, 이게 결국은 노동부는 한다고 하지만 기재부가 전혀 협조를 안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지요? 결국 예산이 부족하면 자기네 예산 줄이고 줄여서 이걸 하려고는 노력은 하는데 폴리텍대학은 용역계약 이윤을 0.1%선까지 낮추면서 했는데도 예산이 태부족이에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건데 그걸 노동부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폴리텍하고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해서, 이것도 캠퍼스가 많다 보니까 어디는 하고 어디는 못 하고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우원식 위원** 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추진 계획을 짜서 저희들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재부장관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 공공 부분에서 선도해야 될 부분은 선도하게끔 해 달라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아니, 제가 받은, 제가 들은 얘기로는 장관이 직접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하시던데, 이거는 기재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노동부가 같이 발표한 지침이잖아요. 지침이,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게 법이 아니어서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지침을 뭐 하러 만들었어요? 지키라고 지침 만든 거면 이게 잘 이행이 안 되면 지키라고 장관께서 세게 하시고 기재부장관한테 '우리가 같이 발표한 거니 예산 편성해 줘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공공 부분의 비정규들 경우에 가만히 있는 거보다 2년 이상 되면 정규직으로 하자라는 지침으로 해서 6만 5000명이 됐듯이 이 부분도 지침으로 해서 작년보다는 올해 소위 지침을 지키는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증가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이 지켜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이 보호지침 실태를 조사하고 이런, 하기는 하는데 권고 수준의 공문만 발송하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9월 23일, 9월 25일 해 갖고 부랴부랴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굉장히 별 볼일 없는 정도의 일로 생각들 하세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이거 제대로 좀 해 보시고. 저희도,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런 지침이 잘 지켜지는 게 결국은 주머니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내수도 돌고 그러는 건데, 결국은 이런 일들이 좀 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올해에도 굉장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기재부하고 협의가 끝나서 국회에 와 있습니다만 이 일에 대한 주무 부처가 고용노동부니까, 지금 저희는 이 문제를 예결위 단계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제기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증액하는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장관께서 실태조사를 다시 하셔서 시중노임단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또는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산출해 주십시오. 그거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우원식 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은……

**○우원식 위원** 그냥 빨리 뽑아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이게 우리 능력으로 될 수 있을지 제가 아직은 자신이 없어서요.

**○우원식 위원** 이건 노동부하고 이거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이게 쿵짝이 잘 맞아야 하는 일이니까, 예산을 뽑아 주시면 우리가 세게 밀어붙일 테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리고 노사정 합의에, 지난번에 잠깐 물어봤는데 시중노임단가를 업종·업무별 세분화 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참 걱정은 시중노임단가를 깎겠다는 소리로 들려요. 그런 소리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단순노무, 제조업 단순노무를 모든 게 적용하고 있어서, 이게 각각 용역을 하고 있는 분야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경비도 있고 청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 세분화가 현재 정해 놓은 시중노임단가를 어떤 업종은 더 낮추고, 그런 건 안 하겠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거는 조사를 해 봐야 나옵니다. 지금……

**○우원식 위원** 그럼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장관이 그거를 방향을 정해 놓고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원식 위원**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결과를 놓고 그때 가서 판단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우원식 위원** 아니, 제가 기재부의 얘기를 들으니까 시중노임단가가 비싸게 잡혀 있어서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선은 정확하게 업종별로 단가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문제는 고민해야……

**○우원식 위원** 이거 손대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거는 일단……

**○우원식 위원** 이거 그때도……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단가가 나온 뒤에 방향을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이거 손대면 안 되는 게, 이게 홍익대 청소노동자들부터 시작을 한 건데,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삶을 지키자고 정부가 만들어 놓은 지침인데 그걸 여기서 깎는다라고 하는 게 그건 정말 비정규직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것을 다시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을 세입에서 좀 늘렸고요. 고용주 부담금, 피고용자 분담금을 1.5·1.3% 늘렸고 고용보험기금 세출에서 구직급여를 또 늘렸는데, 이건 뭐냐면 아마 김무성 의원이 내놓은 그 법에 실업급여 지급기간, 지급액을 늘리는 것 때문에 예산을 늘렸어야 되는가 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 부분도 6개월치가 반영돼 있고요.

**○우원식 위원** 그런데 이 고용보험기금 보험요율을 올리려면 이거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절차도 안 밟고 다 끝나지도 않고 예산부터 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김무성 의원 법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나 됐습니까?

1분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은 저희들 보기에 정기국회에 예산, 소액이 아니고 1조 이상……

**○우원식 위원** 아니, 지금 논의 시작도 안 했는데 예산부터 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 그래서 정기국회 안에 법과 예산이 한꺼번에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법과 예산을 같이 낸 겁니다.

**○우원식 위원** 아니, 지금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 부분.

그러니까 통과될 것이다? 이거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 보강은 국민……

**○우원식 위원** 이거는 입법권의 침해입니다.

그리고 김무성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이 이게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늘린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또 다른 면을 보면, 제가 대정부질의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급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30세 미만 청년의 27%인 1만 6000명, 그다음에 영세근로자가 3만 8000명, 그래서 지금 까다롭게 하는 데서 6만 6000명이 실업급여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거 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못 받게 돼요, 까다롭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동의할지 안 할지 한 번도 논의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예산부터 올려놓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예산이 필요했을 때 관련 법률도 우리가 예산 부수법으로 이렇게 처리하듯이 저희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률안도 여당에서 냈고 관련된 예산을 같이 내서……

**○우원식 위원** 그 여당에서 낸 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는 게 저희들은 근로자를 위해서 마땅히……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법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지켜져야 할 절차라 보고 있고요.

또 규모와, 말씀하신 규모와 관련해서는……

**○우원식 위원** 자,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예산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뒤로 예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 정기국회가 넘어가 버리면.

**○우원식 위원** 그걸 왜 못 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정기회 지나고 나서 예산 시기가 끝나 버리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원식 위원** 추경 해서 내년에 하면 되지요, 법이 통과되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시작하자마자 추경을……

**○우원식 위원** 시행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게 낫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법과 예산을 함께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은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원식 위원** 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예산을 국회에서 어떻게 심의하느냔 말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규모……

**○우원식 위원** 이 법은 깎는 게 맞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런 고용보험제도에서 진짜 해야 될 거는……

……

특고노동자, 초단시간 근로자 이런 사람들을, 그 사각지대를 해소해 줘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문제를 해소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2014년에 117만 명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알바해 갖고 그냥 용돈이나 버는 것 같지만 지금은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바가 아니고 자기 생활비를 벌러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일자리가 없어서 이런 데 가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15시간 이하 일한다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제한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법을 냈는데 고용부에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반대하지 마시고 이런 법부터 좀 통과시켜야 이게 노동개혁이지요. 취약계층, 우리 사회의…… 사람 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심장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아픈 데라고 생각해요. 아픈 데를 치유해야 그 사람 몸이 건강해지거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사회의 중심은 아픈 데입니다. 이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에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렇게 국회에서 논의도 되지 않은 것을 법으로 강행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권 침해하지 마시고 정말 취약한 사람들의 고용보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동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특고 관련은 저희들이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위해서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데, 엊그제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배달업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절실하고 그래서 빨리 통과가 돼서 절실한 부분이 산재가 강제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초단시간 근로 문제는 현재 아르바이트 개념을 넘어서 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금도 보호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은 숫자가 저희들한테 많이 잡히진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원식 위원** 그게 어디서 보호를 해요?

**○위원장 김영주** 장관님, 위원님들께서 예산 관련하고 정책질의의 의견을 얘기하면 장관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명하시는 그 답변이 너무 길어져서, 위원님들 질의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초단시간 문제는 노사정에서 후속으로 논의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장관님,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남영전구, 남영전구를 보면 이게 남영전구 자체는 제조업이긴 한데 사실 사고가 난 상황을 보

면 이게 건설공사, 철거공사기 때문에 공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설공사를 도급을 줄 때는 원청업체가 전체적으로 다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번에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슷한 사항으로 이게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으로 해서 이미 2008년에 대법에서 판례가 그렇게 난 적이 있습니다.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해야 되는 산업안전 예방조치를 미비했을 경우에 29조를 적용해서 이미 대법 판례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금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적용을 좀 해서 이걸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산재는 이제 요양 신청되고 하면 나중에 노동부가 보고를 받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중독이나 직업병과 관련한 것은 그냥 요양 신청이, 그러니까 산재로 결정 나기 이전에라도 요양 신청이 일단 들어가면 보고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거 자체를 보고를 너무 늦게 받으셔서, 사실은 중독은 좀 큰 문제인데 굉장히 노동부가 손 놓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독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화학물질 건은 요양 신청이 들어가자마자 보고가 좀 되는 소통 체제를 확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지금 사실 저도 불만인 게 고용보험기금에서 모성보호급여 계속 나가는 거 우리 계속적으로 애기하는데 사실 일반회계 1000억도 안 되게 이번에 넘어왔는데요. 그 1000억도 안 되게 넘어온 것 중에 특히나 모성보호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엔 하나도 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저는 고용부가 하지 않으려고 해서 이렇게 되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아마 조율이 잘 안 되시는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노위 차원에선 이건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이게 노사가 만들어 놓은 돈을 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된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자꾸 들어가는, 그것도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는 계속적으로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키기로 한 것에 대한 정확한 퍼센티지를, 그러니까 지금은 액수로 하고 있는데 이게 퍼센티지로라도 조금 증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산재보험기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 출연할 때 퍼센티지로 주고 하듯이 일반회계의 전입금도 퍼센티지라도 해서 매년이라도 어느 정도 일정 금액, 금액이라도 상향되는 방식으로라도 조절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건 국무회의에서라도 계속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모성보호급여 애기가 나와서요 지금 숫자를 살펴봤더니 출산휴가를 간 사람, 출산휴가를 가서 출산휴가급여를 받은 사람과 실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한 85%……

**○한정애 위원** 즉 다시 말하면 출산휴가를 간 사람이 육아휴직을……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육아휴직을 갑니다. 8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애기냐 하면 1년 미만 비정규직의 경우에, 비정규직은 그러면 출산휴가도 못 가고, 아예 육아휴직급여는 고사하고…… 숫자가 같다는 건 결국은 정규직, 1년 이상 되는 정규직들이 이거를 쓴다는 애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육아휴직급여를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만히 여성들이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이게…… 사실 요즈음 나쁜 사업주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쪼개기 계약 같은 걸 통해서 1년이 안 되게끔, 1년이 지나면 퇴직급여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1년 전에 계약 해지하고 다시 재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한 사업장에서 몇 년씩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게 실제 상황이고요.

그래서 1년 미만 근속한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결국 꾸준하게 사실은 고용보험기금은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오히려 또 본인의 권리로서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권리가 일부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고령화사회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1년 미만 근무자가 육아휴직급여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좀 빠지도록 이번에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다시 작성하실 때 이게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할 것 없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차별적인 제도는 폐지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말씀 잠깐 올리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선 산안법, 모든 사업장 내에 사고든 질병이든 나오면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성을 강화하는 부분은 지속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저희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그런 취지가 강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예방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특히 직업병과 관련된 유해물질 관련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정보가 저희 복지공단, 안전공단, 저희 고용부 지청 간에 바로 즉각즉각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보강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정규직들의 모성보호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것,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기간을 저희들이 늘리자 하는 부분도 그런 취지도 있고 1년 미만에도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것, 쪼개기 근절을 하자는 취지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마지막에는 기간 산정함에 있어서 육아휴직이나 산전휴가를 가면 기간 산정에서 제외해 주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아무튼 권리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제한이 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든지 줄여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제가 국정감사 내내 지적을 좀 했는데요.

광고홍보비 턴키로 집행하는 것 이게 사실 노동부 자체로서도 잘 정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예산 들어올 때도 이게 각 사업별로 사실은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턴키 홍보로 가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안 나와 있거든요. 안 나타나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홍보 관련 예산이 구체적으로 적시될 수 있도록 상임위, 저희가 소위 할 때 좀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가 적절하게 부적정한 것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업이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청구 지속적으로 제가 드립니다. 이인영 간사님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같이……

**○이인영 위원** 제가 감사원장을 할게요.

(웃음소리)

**○한정애 위원** 협의해서 해 주셔야 되고.

지금이라도 지난번 것까지 쓰여진 사업비에 대한 노동부의 제대로 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턴키 홍보로 줬다고 해서 전혀 관리 안 되고 영수증 들어온 것만 믿고 그냥 돈을 주셨는데 잘못 집행된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돈을 집행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무슨 방법을, 턴키다 또는 개별로 한다 이런 게 정해지지 않고 사업별로 국민들한테 사업 내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홍보사업을 편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저희 사업국에서 일정 부분을 턴키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첫째는 턴키 제대로 알리는 방법을 제대로 선정을 하고 턴키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선정 과정에 있어서 분명한 공개 방식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또 선정이 된 뒤에도 턴키 홍보 내용에 있어서도 아주 적절하게 편성되도록 하고 또 그 예산 집행 과정도 철저하게 따져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지난 4년 동안 제대로 적절하게 집행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스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스민 위원** 장관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을 하고요, 제가 이거 전부 다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 그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외국인력센터가 거점 센터 8개소, 소지역 센터 31개 등 39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는데 문제는 거점 센터에 비해서 소지역 센터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인데 거점 센터의 경우는 인건비에서부터 운영비, 사업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소지역 센터에는 인건비 일부와 부식비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이 중에 인건비 경우 2012년 소지역 센터는 27개 지정될 당시에는 6억 6000만 원이고 2014년에 세 군데나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6억 6000만 원을 했고 올해 31개가 지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억 6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매년 일률적으로 50명만을 대상으로 월 1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580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은 116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 정도는 최저임금이 126만 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아직 110만 원 정도 되면 사실상 생색내기식 지원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 소지역 센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넘어서 사업비로까지 지원을 확대해서 거점 센터가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맞는 밀착형 소지역 센터가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역에 있으면 지역 특성에 따라서 소지역 센터가 훨씬 더 잘 알고 있는데 사업비 관련된 부분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 당시에 공단이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쉼터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쉼터에 대한 지원금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쉼터 이용자 수에 비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공단이 지원하는 쉼터 수가 2014년 14개에서 올해는 16개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공단은 물론 고용노동부에서도 쉼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늘렸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은 2013년도 5월부터는 월 4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거랑 똑같이, 소지역 센터 지원과 마찬가지로 정말 생색내기 지원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좀 잘 전반적으로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원 예산을 보다 현실화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취성패Ⅰ유형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 없이 고용센터에서 직접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추경예산 편성 당시에는 고용센터 취성패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로 위탁사업비 195억 원을 반영했는데 그럼에도 내년 본예산에는 민간 위탁하는 사업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말씀하신 대로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시장으로 못 한 부분은 자치단체나 정부가……

**○이자스민 위원**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의지를 가지고 도와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공공서비스가……

**○이자스민 위원** 그런데 위탁사업……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공공서비스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꾸 이게 나누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래도 좀 서비스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청년 부분을 위탁으로 다 내놓고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은 공공서비스 하는 걸로 그렇게 큰 방향을 잡아서 선정을 했는데 금년도 추경을 하면서 물량이 확 늘어나서 사람을 저희가 센터에 뽑을 수도 없는 그런 사정이라 금년에는 불가피하게 또 하반기에는 좀 위탁을 했고요.

큰 방향이 잡힌 대로 청장년은 위탁,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계층은 센터가 이렇게 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사실 취성패Ⅰ유형 대상 중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나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미혼모 등 특정 계층은 대상별로 특성이 대단히 상이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따라서 경험이나 지식이 훨씬 풍부한 그런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Ⅰ유형에 대해서 위탁사업비가 신규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예산보다 사업이나 프로그램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맞

춤 무료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취업사관학교의 경우는 사업 대상자 중 여학생 비율이 40%를 넘고 있지만 수혜자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학생 수혜자는 70% 훨씬 웃돌고 있고요.

단순히 사업목표 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여성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로 양성평등 제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대부분 남자청소년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 프로그램 발굴에 훨씬 더 능력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 예산의 일정 부분은 다양한 직업체험 운영기관 발굴에 소요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16년도 신규로 편성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에도 유연근무제 도입 30만 원, 재택·원격근무제 도입 20만 원이라는 지원으로 과연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을 유인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장관님은 이 신규사업의 실효성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유연근무제가 가능하도록 법률적·제도적 보완을 해 주고, 그다음에 사업장에서 이런 것들이 선도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이자스민 위원** 맞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목적입니다. 사업장에서 선도적으로 되는 그것을 저희들이 사례로 홍보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31억 가지고 효과는 더 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들의 경우는 정말 일·가정 양립 중요성 모두 인식을 하고 의도도 있지만 그래도 유연근무제 등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신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을 통해서 기업 현장에서 제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다 폭넓게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봤는데요, 국민일보 이 신문기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기본계획에서 이민정책을 포함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정부가 2017년 수립하는 중장기 이민정책은 2018년~2022년까지 5년간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의 규모와 대상을 좌우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중장기 이민정책이 언급되기도 하고요.

저번에도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지난해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이민자를 2030년까지 926만 명, 2050년까지 1479만 명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서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고요, 정부는 외국 우수인력을 중심으로 영주·귀화를 허용하도록 체류자격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리고 우수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장기 이민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 우리 청년실업이거든요. 당장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데 외국의 고학력·전문직 이민자를 받아들이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정부가 우수인력 유치에 초점을 맞추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제조·노무직에서 주로 일손 부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미스매칭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 사실상으로는 유학생들도 오래 머물 생각도 없고, 사실 고학력자·엘리트는 한국에 오래 머무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저번에, 올해 독일 갔을 때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이민전문가가 어떻게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에서 고학력자·엘리트 유치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으로는 우리가 제조·노무직에서 일할 사람이 훨씬 더 필요한데……

이 기사를 보시고요 장관님의 의견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된 글, 문제되는 그런 부분, 마지막 언급했던 그런 부분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취업사관학교 부분은 직종을 선정하거나 또 관리할 때 여학생들이 배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이자스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장관님, 일반적으로 예산 증감을 표현할 때 표현하는 양식이 추경예산은 빼고 증감을 표시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아까 이인제 위원님이 11.5%의 허구 이런 것은 지적을 하셨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 더 확보하도록……

**○이인영 위원** 일반회계에서 0.6% 늘어난 것으로 정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추경예산까지 하면 내년 예산은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2.6%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이게 산수의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정부예산이 3% 증가하는 것에 비하면 일자리라든가 등등과 관련된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내년 세입에 대한 감소 예측 때문에 이렇게 조정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은 제가 예산 당국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도 일반회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관철이 안 됐고요. 기본적인 것은 저희 고용노동부 사업들이,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사업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용보험, 산재 이렇게 기금화되어 있는 측면도 강하다, 그래서……

**○이인영 위원** 기금 문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해마다 일반회계 지출의 폭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기금 지출의 폭이 증대하고 있잖아요. 그 추세가 반복되고 누적적으로 증대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기금 안정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저희들 공감합니다.

**○이인영 위원** 아까 이석현 부의장님 지적은 그런 면에서 실제로 타당해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일정한 의미에서는 임계선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차관님은 그런 부분들 이론적으로도 많이 점검하셨을 텐데 그게 어느 정도 선인지 이런 것들을 잡고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도 또 다른 대책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장기적으로 인건비, 관리비 부분은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고, 두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성보호 관련해서 출산휴가는 예를 들면 건강보험에서 한다랄지 또는 일정 비율로 분담 방식을 한다랄지 이런 부분에 정부 내의 어떤 합의를 해서 지켜지도록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노력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일자리 예산 증가 또는 효율화 이런 것을 통해서 청년고용 기회도 확대하고 또 사회안전망도 확대해야 되고 이런 등등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 예산 자체가 형식적으로는 증액된 거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 따져 보면 모성보호, 육아지원 등의 이런 자연증가분 이런 것들이 크고 오히려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은 감액하셨단 말이에요.

27억 감액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거다 이런 우려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조기재취업수당 그다음에 근로자능력개발지원,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의 사업은 감액될 게 아니라 증액됐어야 하는데 거꾸로 갔다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정부가 일자리사업 15조 넘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 직접 정부가 사업을 해서 거기 채용하는 것을 통상 저희들이 직접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주로……

**○이인영 위원** 지금 경기가 어려워진다고 정부가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세입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재정당국이 전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 대한 일반예산 이런 것들을 정부예산의 증대 폭에도 못 미치게 이렇게 한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많은 청년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민간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쪽에 지원하는 것을 좀 늘려서 잡고, 정부가 직접채용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적들도 많았고 해서……

**○이인영 위원** 경기가 활성화돼서 시장의 기능이 활발하다면 왜 정부가 이런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 보호사업에 이렇게 직접 나서겠어요? 그러니까 시계 바늘이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 위원님이 이미 지적하셨는데 법적 근거 없이 수입과 지출 예산을 수립하는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가 올해 예산 할 때 이런 법적 근거 없는 부분들은 가급적 안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건데요. 올해도 이미 또 야구로 치면 치고 달리기처럼 이렇게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것들에 근거해서, 법안 통과될 것을 예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치고 달리기가 성공하면 상관없는데 병살타로 끝나면 큰일 나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실업급여 증액 들어가는 예산하고 법을……

**○이인영 위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 텐데요. 그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용보험요율 1.7%로 계상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등등 구직급여 지출, 조기재취업 수당, 그다음 작년 고용안정에서 이른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퇴직급여제도 정착 지원,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지원 중에 대체인력 지원사업 등 이런 데, 또 하나 더 하면 퇴직연금사업 운영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법령적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부재한 것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예산 소요 할 때 정확하게 대책이라든가 소명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 법령 구비가 안 돼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소위 할 때 법령 구비 여부 진행 상황을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예컨대 실업크레딧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정부하고 여당이 조율해 가지고 법사위에 묶여 있는 것을 푸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 준 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법적인·제도적인 보완을 한 것도, 사후적으로 그것도 보완한 것인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치고 달리기로 예산 편성하고 또 법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해서 병살타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관행적으로 반복되면서 좋지 않은 거 같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편성할 때 집행실적이 낮은 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의 재검토를 통해서 질적인 효율을 제고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부대의견까지 달아 가지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라든가 취업성공패키지라든가 청년취업진로사업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인데 사업실적이, 집행실적이 지금 50%도 안 되고, 조금 넘고 이런 상태예요.

그중에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하고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그리고 국가기간 전략산업 중 훈련사업 이런 것들은 집행실적이 부진하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감액조치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건데요,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추경에 편성된, 방금 말씀하신 인턴이랄지 취업성공패키지랄지 전략산업 부분은 저희들이 10월, 11월, 12월 하게 되면 상당 부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지금 열 달이 지났는데 한 50% 밖에 안 된 게 두 달 사이에 하면 또 오히려 졸속으로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그것은 소위에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추경 편성하고 준비하느라고 실제 추경 이후 한 두 달밖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좀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상세한 내용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심의할 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장관님한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남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노조 지부장이 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지방청 국정감사 할 때 참고인으로 모셔 가지고 진술을 들은 게 있어요. 이른바 창조컨설팅이 노조 파괴하고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청취했는데, 이미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로 창조컨설팅은 인가 취소했었잖아요, 그 회사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인영 위원** 그런 정당성이 있는 진술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등등의 활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래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회사에 나름대로 이유, 사정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게 국정감사의 잉크가 다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참고인 진술을 하신 분을 불러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보복인데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

로, 정당한 어떤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고를 시키는 이런 사례가 나타난다면 어디 겁이 나서 국회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이렇게 모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살피셔서 부당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저 1분만 좀 주시면……

**○위원장 김영주** 2분 드리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님 하십시오.

**○이자스민 위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사에서 나왔던 그런 한 부분인데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수 인력이나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 오래 머무르려 하지 않는 게 현실이고 우수 인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한국인이 취업하기 어려운 직종에 선택적으로 유치·지원하는 등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하청업체나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원청업체도 부담을 지게 하거나 외국인을 채용해 얻게 되는 이익을 세금을 물리는 식으로 내국인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이런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현실적인 그런 의견을 부탁드리고요. 그 의견이 이번 저출산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자스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영 위원님도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인영 위원** 제가 깜빡하고 놓쳐서 그러는데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렸던 국제기능올림픽, 장관님 그때 노동개혁 때문에, 이른바 노동개혁 때문에 못 가셨는데 저희들이 다녀왔잖아요. 다녀와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연속해서 저희들이 종합우승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부가 판단할 때 이게 계속 우리가 우승하는 게 꼭 좋은 거냐, 다른 나라한테 기회 줘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면 견제가 심한 만큼 우리도 그 지원이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격년별로 이렇게 경기가 열리는 그해에만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른바 상비군의 훈련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좀 예산 지원들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는데 소위 국제기능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해에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가능하면 안 열린 그 격년제에 지금은 거의 뭐 열리던 해의 1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증액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뭐 저희가 우승에 혈안이 되자는 것보다도 그런 과정에서 기술적 진보의 힘들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지원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지금 세계기능올림픽 관련해서 이인영 위원이 예산 관련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현장 가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조차도…… 특히 우리 정부에서 청년들 스펙 쌓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능선수단 청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나 관련 기관 말고라도 여기에 대한 홍보나 지원이나 이런 게 좀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 말씀해서 갔다 오면 청와대에서 그냥 밥 한 끼 먹고 이렇게 격려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우리나라도 스펙이 아닌 기능을 갖고 있는 청년을 육성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도 좀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러한 지원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정된 일정대로 예산안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대체토론 중에 이인제 위원님, 김용남 위원님, 권성동 위원님, 은수미 위원님, 민현주 위원님, 최봉홍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양창영 위원님, 이자스민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그리고 저도 서면질의를 제출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 전까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양창영 위원님, 이자스민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특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손충덕 수석전문위원과 보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

**○출석 위원(15인)**

| | | | |
|---|---|---|---|
| 권성동 | 김영주 | 김용남 | 민현주 |
| 심상정 | 양창영 | 우원식 | 은수미 |
| 이석현 | 이인영 | 이인제 | 이자스민 |
| 장하나 | 최봉홍 | 한정애 | |

**○출석 전문위원**

| | |
|---|---|
| 수석전문위원 | 손충덕 |
| 전문위원 | 김양건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 | |
|---|---|
| 장관 | 이기권 |
| 차관 | 고영선 |
| 기획조정실장 | 한창훈 |
| 고용정책실장 | 이재흥 |
| 노동정책실장 | 권영순 |
| 정책기획관 | 김종열 |
| 국제협력관 | 박성희 |
| 노동시장정책관 | 정형우 |
| 고용서비스정책관 | 권기섭 |
| 청년여성고용정책관 | 나영돈 |
| 고령사회인력정책관 | 문기섭 |
| 직업능력정책국장 | 박종길 |
| 노사협력정책관 | 임무송 |
| 근로기준정책관 | 정지원 |
| 공공노사정책관 | 황보국 |
|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 안경덕 |
| 대변인 | 시민석 |
| 감사관 | 조병기 |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 김대환 |
| 중앙노동위원장 | 박길상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 이재갑 |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 박영범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 이영순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 박승규 |
| 한국고용정보원장 | 유길상 |
|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 이우영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 김기영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 엄현택 |
| 한국잡월드이사장 | 장대익 |